
이재명 대통령 후보 코로나 비상대응 긴급성명

2021. 12. 14.(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입니다.

국민들의 희생과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우리는 다시금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5차 대유행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상황입니다.

전 국민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중증환자가 900명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습니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82.6%에 달하면서 사실상 포화상태입니다.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 우선, 저와 민주당도 비상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로나19 상황실’을 확대하여
원내대표가 책임 있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제로 전환해 주십시오.

○ 정부에도 선제적인 비상시스템 가동을 촉구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합니다.

둘째,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국민 안심대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의 방역조치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先보상 先지원’을 시행해야 합니다.
선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합니다.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셋째,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국난 극복에 국민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평범한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와 ‘제3차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재난 상황에는 비상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은 즉각 행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